

정부, 日 제소 반박 '독도 구상서' 전달

이르면 주초에… APEC회의 한일 외교갈등 분기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초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낸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간 외교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구상서 작성 및 발송 자체는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다"면서 "발송 시기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이르면 이 번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상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ICJ 제소를 일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압축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서울의 외교체널을 통해 일본측에 구상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의 구상서 발송으로 한일 외교전이 일단 일단락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다 일본도 총리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추가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도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총리 서한을 반

송받고 총리가 추가적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을 볼 때 일본도 내부적으로 더 가서 좋을 것이 없다는 관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을 접점으로 한고비는 지나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 수준이 현재의 고강도에서 국제적 흥보여론전 강화 등 저강도

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권 기반이 취약한 노다 정권이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계속 독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축량 시도 등 물리적 행동까지 감행할 경우 한일 양국간 독도 갈등의 수위는 지금보다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다음 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한일 외교갈등의 분기점으로 외교가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외교 갈등의 봉합을 원하면 10월 선거 전 노다 총리의 마지막 다자회담 무대인 APEC에서 양자 회담을 주진할 것이라 분석된다. /연합뉴스



독도사랑 농구대회

대한농구협회 주최로 25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서 열린 제2회 독도사랑 농구대회에서 선수와 심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도 일본에 강경 대처해야"

홍콩 사우스차이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태도를 보고 중국에서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분석했다. SCMP는 25일 자에서 한·중·일의 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처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대통령의

도 방문에 이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가 반송한 것을 보고 중국도 일본에 강경하게 나가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한 웨이보(微博·중국관트위터) 사용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실망스럽다"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사용자는 "중국이 이번 기회에 일본에 강한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학원의 일본 전문가인 저우융성(周永生)은 "대중의 반일 감정이 고조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노다 정부가 한

국 외에도 러시아와도 최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도 있다.

저우융성은 일본이 현재 직면한 외교적 대처상황이 다오위다오 분쟁에 서 중국에 유연성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긍정적인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강경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은 보다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노다 日 총리 서한 정부, 반송 확인

정부는 등기우편으로 반송 조치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서한을 일본 정부가 되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이틀 전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노다 총리 서한이 어제 오전 일본 외무성에 도착한 사실을 컴퓨터의 (배달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노다 총리 서한을 반송하려 했으나 일본이 우리 외교관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외무성 방문 접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우편으로 노다 총리의 서한을 둘러보냈다.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여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 일련번호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건물구함〉

- 지역 : 광주군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평~300평 · 유통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청고동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개실 20개 대출 42천 매도가 8·9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대도가 30억 보증금 7억 대로 1400만원

- 대도가 45억 보증금 6억 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평 30m 도로질, 농지전용 원로,

-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주군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m²(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m²(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광주군 흥정면 창성리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 T. 062) 371-1900, 010-2006-0115

-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858849.co.kr

- FAX(223-1772) 011-602-2532

- 1010-8289-8549

- (광주동행 신분점: 대동 삼성빌딩 1층)

- FAX(383-5221) 011-609-5221

- (상무지구 아디움 김자현 1층)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애플 완승…향후 전망은

삼성 타격 속 항소심서 대반격

신제품 판금 조치 맨美 시장 입지 축소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건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 분야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함하는 디자인)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 4934만 3540달러(약 1조 1910억원)

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아직 재판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항소심 등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평결 후 판결 남아=이번에는 배심원단이 판단하고 이를 항복별로 평결에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평결 후 소송행위(post-verdict motion)를 통해 애플이 최대 3배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항소심서는 법리·절차 다툼 예상=일반적 예상대로 1심 판결이 똑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리지만, 드물게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다면,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헛되지는 않다. 명백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평결 내용이 판결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 고의적 침해로 징벌적 배상 가능성=평결 내용이 판결로 그대로 이어질 경우, 판결 배상액이 평결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중 상당수를 "고의로(willfully)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하고 이를 항복별로 평결에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 특허 침해” 평결 구글 이메일 결정적 역할

“애플세 대비해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 이후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이 애플에 특허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이른바 '애플세(稅)' 영향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온라인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혁신에 있어 다양한 애플의 특허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나 소비자들이 주장해온 운동과 이후에도 항소심 등에서 판결 결과가 회자되거나 자신의 경우 문제가 된 특허를 살펴보면서

"만약 이것이 내 특허로 내가 소송을 당했다면 스스로 이를 변호할 수 있을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24일 애플이 주장한 특허를 대부분 인정하고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이같은 평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삼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부지방법원은 다음달 애플의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 심리를 여는 데 판결 과정에서 배상액 규모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온라인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혁신에 있어 다양한 애플의 특허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나 소비자들이 주장해온 운동과 이후에도 항소심 등에서 판결 결과가 회자되거나 자신의 경우 문제가 된 특허를 살펴보면서

"만약 이것이 내 특허로 내가 소송을 당했다면 스스로 이를 변호할 수 있을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24일 애플이 주장한 특허를 대부분 인정하고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이같은 평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삼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부지방법원은 다음달 애플의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 심리를 여는 데 판결 과정에서 배상액 규모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애널리스트인 알 힐가는 "큰 애플세가 있을 수 있다. 전화기가 더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결로 애플이 법원에서 보호받길 원했던 다양한 기술에 대해 경쟁 제조업체들이 특허에 따른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애널리스트인 알 힐가는 "큰 애플세가 있을 수 있다. 전화기가 더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24일 애플이 주장한 특허를 대부분 인정하고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이같은 평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삼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부지방법원은 다음달 애플의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 심리를 여는 데 판결 과정에서 배상액 규모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배심원단은 24일 애플이 주장한 특허를 대부분 인정하고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이같은 평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삼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부지방법원은 다음달 애플의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 심리를 여는 데 판결 과정에서 배상액 규모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배심원단은 24일 애플이 주장한 특허를 대부분 인정하고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이같은 평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삼성에 상당한 부